

# 3개월 근무해도 퇴직금...고령자·고소득 전문직 파견 허용

##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고용노동부가 23일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형태별 맞춤형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진...차별·남용 방지=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고용형태별로 근로조건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을 우선 임시로 채용하는 관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3개월 이상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1년이 못돼 계약이 해지된 근로자 195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편의점 판매 종사원, 주유원 등 단순노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여객선 선장, 기관장, 철도 기관사, 관제사, 항공기 조종사, 관제사 등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만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외주 노동시장 합리화 유도...파견업종 확대=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일시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에 비해 경직된 파견 대상과 업종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32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이 추가

## 선장·기관사·조종사 등 국민 생명·안전 관련 업종 계약직 채용 금지

된다. 고소득 전문직은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등은 파견이 계속 금지된다. 고용부는 인력난이 심한 업종을 대상으로 노사정 위 논의를 거쳐 파견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장이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복지·훈련 제공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파견·도급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내하청업체의 위험직업에 대한 원청의 공동안전보건 조치 의무대상을 현행 20개에서 더 늘린다.

◇노동시장 활력 제고...정규직 채용 노력 확대=추가연장 근로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시 노사부담 완화를 위해 주당 8시간까지 인정하되, 월·년 단위로 총량을 규제한다. 1개월 총량은 24시간, 1년은 208시간이다.

연구개발이나 기획업무 담당자 중 고소득 근로자에겐 업무 단위로 근로 총량을 측정하는 재량근로가 적용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도 최장 1년까지 늘어났다. 야근 등 더 일한 시간을 모아 휴가를 갈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도 도입된다. 기업이 불가피하게 경영상 정례회고를 하더라도 경영이 정상화되면 동일 직종에 재고용토록 하는 등 질적적 요건을 강화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비정규직 양산하는 정부대책 철회하라” 29일 오전 세종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차별실태조사 발표 및 정부 종합대책 비판’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 내용이 적힌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올 한국 찾은 외국 관광객 1400만명 넘어섰다

세월호 등 악재 불구하고 작년보다 16.6% 늘어...요우커 600만 돌파

올해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이 1400만명을 넘어섰다.

한국관광공사는 29일 관광공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한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이 이날 14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1978년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은 연간 100만명에 불과했지만 2000년 500만명, 2012년 10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1200만명을 돌파했다.

관광공사는 올해 세월호 참사와 연호 약세 등 악재에도 1~11월 방한한 외국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16.6% 증가해 10년 사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을 가장 많이 찾은 외국인은 중국인(571만명)으로 지난해보다 40.9% 증가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단일 국가 관광객으로는 처음으로 연말까지 6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올해 홍콩·마카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찾은 나라가 됐다. 중국 다음으로 한국을 많이 찾은 관광객은 일본(211만명)과 미국(72만명) 관광객이었다. 증가율로 보면 중국에 이어 홍콩(50만명·39.4%)과 태국(42만명·25.2%), 러시아(20만명·24.0%)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외국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올해 관광수입은 176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외국 관광객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생산유발 효과는 전산업에 걸쳐 약 31조원으로, 휴대전화 3700만대 또는 중형 자동차 47만대 수출과 같은 효과라고 관광공사 측은 설명했다.

관광수지는 지난해보다 약 6억달러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공사는 내년 외국 관광객 1550만명, 2017년 외국 관광객 2000만명 달성을 목표로 고부가가치·특수 목적관광(SIT) 소재를 개발·육성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2015~2016년에는 한중 관광의 해 기념사업과 한·불 상호교류의 해 등 국가간 방문·교류 행사 등을 계기로 한국 관광 흥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홍기 관광공사 마케팅전략팀장은 “개별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한국을 다시 찾고 싶은 나라로 만들겠다”며 “당초 2020년 2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했지만 3년 앞당긴 2017년에 조기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유찰...유찰...전두환 재산 환수 ‘삐걱’

### 팔린 부동산 없이 해 넘겨

### 환수액 49%서 수개월 답보

거래의 추정금액을 징수하기 위한 전두환(83)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처분 절차가 올해에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24일 캠코가 공매로 내놓은 전씨 일가 소유의 서울 서초동(우성공사 사옥)과 부지가 또다시 유찰됐다. 시공사 유찰은 지난 1월 이후 네번째다.

시공사 건물·부지는 매각예정이 146억원에 첫 공매 절차가 이뤄졌으며, 세 차례 거듭 유찰돼 10개월 후인 지난해에는 이보다 20% 떨어진 117억원에 진행됐다.

하지만 건물 2개동 가운데 식당·창고 용도 건물만 별도로 35억원에 팔렸을 뿐 본 건물인 사옥과 부지 매각은 다시 무산됐다.

전씨 추정금 환수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에 따르면

1997년 4월 대법원이 전씨에 대해 확정된 추정금 2205억원 가운데 절반 가량인 1087억원이 징수됐다. 남은 액수는 1118억원으로 징수율 49%에서 수개월간 답보 상태다.

지난해 9월 특별환수팀이 전씨 일가로부터 확보한 총 1703억원 상당의 책임재산 중에서도 32%인 554억원만 환수됐다.

당시 전씨 일가가 추징에 응하겠다고 내놓은 책임재산 가운데 부동산이 8건, 총 1270억원 상당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이중 캠코가 지난 2월의 3차 공매에서 180억원에 매각한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을 제외한 나머지 7건은 아직 처분되지 않았다.

캠코에 매각이 의뢰된 전씨 장녀 효선씨 소유의 경기 안양시 광양동 임야·주택은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반면, 입찰가가 높다는 평가 속에 6차례나 유찰됐다.

성강문화재단 명의로 돼 있는 경남 합천군의 전씨 선산은 4차례 공매를 거치며 가격이 40%나 내려갔지만 매각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캠코는 시공사와 관양동 임야,

합천 선산 등 남은 3건 부동산의 공매 절차를 일단 보류하고 향후 절차를 검찰과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매각 방식을 바꾸거나 값을 내리더라도 부동산 매각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 부동산 처분의 목적이 추징금 징수인 만큼 무작정 가격을 깎을 수도 없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씨 장남 재국(55)씨 소유인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250억원)의 경우 두 번의 공개입찰에도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수의계약으로 매각 방식을 바꿨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마저 허브빌리지에 포함된 농지 취득 절차로 어려움을 겪다 계약이 무산되자 후순위 대상자와 다시 협상을 벌이는 등 처분에 애를 먹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통상적인 채납압류재산의 경우 감정가격의 50%까지 가격을 내려 공매를 진행하지만 전 전 대통령 재산은 별도 절차로 공매가 의뢰된 점을 고려, 향후 검찰과 협의를 거쳐 공매 가격이 일정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 2만7천명 인물정보 한눈에... '2015 한국인물사전' 발간

국내 각계각층 주요 인사 2만7천여 명의 프로필을 담은 국내 최대 인물사전 '2015 한국인물사전'이 출간됐습니다.

국내 각계각층 주요 인사 2만7천여 명의 프로필을 수록한 '2015 한국인물사전'이 발간됐습니다.

연합뉴스가 펴낸 이 사전은 정·관계를 비롯해 경제계·학계·언론계·문화예술계·체육계·종교계 등에서 활동하는 저명 인사를 두루 망라하는 국내 최대의 인물사전으로서 자세한 인물정보와 함께 사진까지 담았습니다.

특히 기획인물편에서는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 4천여 명의 명단(상권 수록)과 프로필(하권 수록)을 한 책으로 편집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수록 인사와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촉해 자료의 정확도를 높였으며, 인터넷과 관련 문헌도 꼼꼼히 참조해 보완했습니다.

2015년판은 지난해에 비해 3천여 명을 추가했으며, 수록인물도 상당수 바뀌어 최신 인물 소개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 국배판·상권 1천 244쪽 / 하권 1천 612쪽  
■ 가격 : 18만원

국립 서울(02)398-3991~3, 371(031)238-2222, 안양(031)271-1236, 대전(042)521-9705, 광주(062)264-5777, 부산(051)226-5035, 대구(053)242-7652, 서울(051)281-0010, 부산(051)441-7400, 대구(053)355-3800